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585호
2016. 11. 14

정책동향

- 건설공사 민원의 합리적 처리 방안
- 인프라 수준의 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시장동향

- 9월 건설 수주, 전년 동기 대비 38.6% 감소

산업정보

- 트럼프의 “New 인프라 투자 계획” 분석
- 글로벌 인프라 회사의 경쟁력 유지 방안

건설논단

- 언제 다가올지 모를 ‘깊은 골’에 대한 고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건설공사 민원의 합리적 처리 방안¹⁾

-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및 위법 민원 제재 등 제도 개선 필요 -

■ 건설공사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고 공기와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

- 건설공사는 현장 주변 주민의 생활상 불편이나 소음·분진, 법적 권리관계의 충돌, 적절한 보상 여부 논란 등 주변 환경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형성하면서 일정한 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민원 발생의 여지가 큰 편임.
- 최근 건설공사로 인한 민원 제기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던 민원인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겠다는 적극적 입장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한편, 민원인의 생명·신체상 위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라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집단심리 등에 편승하여 적극적인 민원 제기의 형태로 포장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에 따라 민원이 권리구제의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실정임.
- 건설 민원은 공기 연장과 공사비의 증가, 민원 처리 이후의 후유증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물론이고 발주처조차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할 수 있음.
 - 2007년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사업'이나 2008년 '밀양 송전탑 건설' 사건에서 보듯,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불가피성은 인정하더라도, 건설 민원은 준공을 당초 계획보다 수년 간 늦추게 하는 등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가 적지 않음.

■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를 위한 법규로는 현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그러나 민원 처리의 주체인 행정기관에서조차 민원 처리로 인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건설 민원 처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계약에서 정해진 대금으로 양질의 제품을 공기 내에 완성하는 것이

1) 본고는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16-26, "건설공사의 합리적 민원 처리를 위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글임.

가장 중요한 목표임. 그러나 건설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 방해나 지연이 있게 되면 공사비의 증가라는 문제를 넘어 사회적 손실은 물론 시공 목적물의 품질 저하나 발주자 등에 대한 신뢰 상실 등 그 폐해가 적지 않게 됨.

- 민원 처리 관계 법령 및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민원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나 충돌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다양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임.
- 악의적·전문적 민원의 발생 증가로 인한 각종 부담 증가로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민원 제기와 관련한 왜곡된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 또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소송 남발로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신속한 민원 처리, 위법한 민원에 대한 제재 등 제도 개선 필요

- 무책임한 민원 제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사 계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성·위법성이 있을 경우 엄격한 책임을 묻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건설 민원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하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건설공사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민원 처리에 따른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민원 민관협의체’의 상설 운영 등이 필요함.
- 민원의 상당 부분은 공사 계약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도 많음. 이러한 공사 계약 외적 요소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해당 사안의 적절한 처리 주체를 연결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회적 갈등 해소의 환경 구축 차원에서 필요함.
- 건설업계에서는 민원 처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부당하고 지나친 민원에 대한 적극적·능동적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하여 공동 대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현행 건설공사와 관련한 구체적 법규들에 대한 손질도 필요함.
- 민간 공사의 경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등에 수급인에 의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발주자(도급인)가 부담하도록 보완되어야 함.
- 공공공사의 경우, 조달청의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등에 민원 처리의 부담 주체를 현행 계약 상대방에서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 변경하도록 개정되어야 함.
- 만일 허위 혹은 기만적 수법으로 건설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보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2 등에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함.

두성규(연구위원 · skdoo@cerik.re.kr)

인프라 수준의 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 양적(투입 원가) 평가에서 질적(성과) 평가로의 전환 필요 -

■ 질적 평가 기준 적용 시 한국은 지속적인 SOC 투자 필요

- 단순히 국토면적당 인프라 연장 순위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G20 국가 중 고속도로 1위, 국도 3위, 철도 6위를 기록함.
- 반면, 국토계수당¹⁾ 도로 및 철도 연장은 선진국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임.
 - 한국의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은 1.48로 선진국 평균인 4.15보다 낮고, 철도연장도 0.05로 선진국 평균인 0.13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임(<표 1> 참조).

<표 1> 국가별 국토계수당 도로 및 철도 연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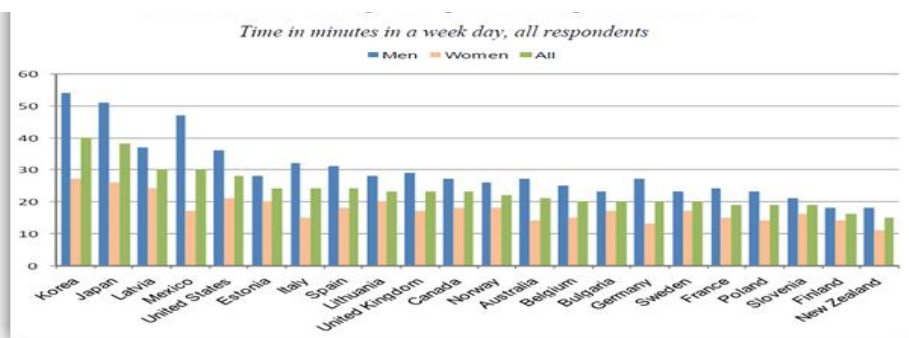
부문	비교항목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선진국평균	한국
도로	국토계수당 연장	3.64	3.79	3.36	5.79	4.15	1.48
철도	국토계수당 연장	0.13	0.19	0.13	0.09	0.13	0.05

자료 : 국토연구원 (2016), 원자료 : OECD, World Bank, 국토교통 DB 센터.

■ 통근자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긴 수준

- OECD Family Database에 따르면 한국 남성이 출퇴근에 사용하는 평균 시간이 약 55분, 여성이 약 27분으로 조사되어, 22개 조사 대상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함(<그림 1 참조>).

<그림 1> 각국의 일일 평균 통근시간 비교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2010 통근.

1) 국토계수 : 국토면적 및 인구를 고려한 시설물 연장을 의미[시설물 연장/√(국토면적(km²)*인구(천명))].

- <그림 1>에는 자영업자도 포함되어 있음.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출퇴근 소요 시간은 훨씬 높은 수치가 제시될 수 있음.

■ 노후 인프라를 고려하면 SOC 투자 대상은 훨씬 증가

- 한국은 압축성장기(1970~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SOC를 확충하였기 때문에 수명주기가 종료되는 시기(2020~2040년)에 재투자 수요도 한꺼번에 발생하는 특성이 있음.
- <그림 2>와 같이 서울시의 30년 이상 노후화 시설이 하수관로 48.3%, 교량 34%, 학교 24.3%에 달함.

<그림 2> 서울시 노후 인프라 조사 자료



자료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인포그래픽, 2015.

■ SOC 스톡 및 투자 규모 측정과 계획 수립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 인구 감소 및 노령화, 저성장, 제4차 산업혁명, SOC 노후화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표 2>와 같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

<표 2> SOC 수준 측정 및 투자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방향

구분	전통적 방법	새로운 패러다임
SOC 스톡 및 투자 규모 측정	투입 원가 및 경제 모델을 통한 적정 투자규모 추정(top-down 방식)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파악된 부족 분야에 투자 자원 배분(bottom-up 방식)
투자의 목표	커버리지 증대	효율성 증대
산업 성숙도	재화생산 경제 바탕	서비스 및 지식산업 경제 바탕
안전 및 환경	안전 및 환경 고려 미흡	안전 및 환경 고려 우선
주요 투자 대상	신규 교통 인프라	노후 인프라 재투자 및 개선
투자 기술	휘발유 자동차, 철도, 항만 등 전통적 교통수단	전기·수소 자동차, 워터넷, 스마트그리드, 스마트 시티 등 신기술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박수진(연구위원 · jin@cerik.re.kr)

9월 건설 수주, 전년 동기 대비 38.6% 감소

- 공공 91.2% 증가한 데 반해 민간 47.2% 감소 -

2016년 9월 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38.6% 감소

- 2016년 9월 국내 건설 수주는 민간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38.6% 감소한 11조 7,199억원을 기록함(<표 1> 참조).
- 국내 건설 수주는 지난 7~8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44.5%, 55.9% 증가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9월 38.6% 감소하면서 3개월 만에 다시 감소함.
- 다만 11.7조원의 수주 금액은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76년 이후 9월 실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으로 금액 자체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공공 부문, 모든 공종이 양호해 전년 동월 대비 91.2% 증가

- 공공 수주의 경우 토목과 건축 모두 양호하여 9월 실적으로는 지난 2011년 이후 5년래 최대치인 2조 2,271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91.2% 증가함.
- 공공 수주가 양호한 것은 지난해 9월 수주가 부진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2/4분기에 발주한 일부 대형 공사의 수주 인식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토목 수주는 9월 실적으로 3년래 최대치인 1조 1,760억원을 기록, 22.7% 증가함.
- 주택 수주는 지난해 9월 수주가 부진한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241.7% 급등함.
- 비주택 건축 수주는 학교 및 관공서 공사 수주 증가의 영향으로 9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인 8,179억원을 기록, 449.7% 급등함.

<표 1> 2016년 9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 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5. 9월	19,096.7	1,187.9	958.1	229.9	81.1	148.8	17,908.7	4,766.2	13,142.5	8,422.8	4,719.7
2016. 9월	11,719.9	2,271.0	1,176.0	1,095.0	277.1	817.9	9,449.0	894.6	8,554.4	6,901.8	1,652.6
증감률	-38.6	91.2	22.7	376.3	241.7	449.7	-47.2	-81.2	-34.9	-18.1	-65.0
2015. 1~9월	97,067.2	18,563.1	13,089.1	5,474.0	2,787.4	2,686.6	78,504.1	10,128.0	68,376.1	46,512.8	21,863.3
2016. 1~9월	99,684.0	22,370.8	12,720.0	9,650.8	5,582.9	4,067.9	77,313.2	8,708.7	68,604.5	45,442.0	23,162.5
증감률	2.7	20.5	-2.8	76.3	100.3	51.4	-1.5	-14.0	0.3	-2.3	5.9

자료 : 통계청(민간 수주는 국내 외국기관과 민자 수주액이 포함된 금액임).

■ 민간 부문, 모든 공종이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47.2% 감소

- 9월 민간 수주는 모든 공종이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47.2% 감소한 9조 4,490억원을 기록함.
- 다만, 9월 실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아 금액 자체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됨.
- 토목 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81.2% 급감하였으며, 비주택 건축 수주도 전년 동월 대비 65.0%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임.
- 한편, 주택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8.1% 감소한 6조 9,018억원을 기록함. 재개발·재건축 수주는 양호했으나 신규 주택 수주가 위축된 것으로 판단됨.

■ 세부 공종별로 건축은 주택과 사무실이, 토목은 기계설치, 발전 및 송전이 부진

- 건축 공종의 경우, 주택과 사무실 및 점포 수주가 부진했음(<표 2> 참조).
- 주택과 사무실 및 점포 수주는 민간의 신규 주택과 오피스 수주 위축으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5.6%, 77.3% 감소함.
- 한편, 공장 및 창고 수주와 관공서 수주는 각각 113.1% 35.1% 증가해 양호했음.
- 토목 공종의 경우, 도로와 철도 그리고 항만 관련 수주가 양호했으나, 민간 비중이 높은 기계설치, 발전 및 송전 수주는 부진했음.
- 도로 및 교량은 지난해 수주가 부진한 기저효과와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0.5% 급등
- 철도 및 궤도는 민자 복선전철 수주 영향으로 211.7% 증가해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며, 항만 및 공항 수주도 항만 재개발 수주의 영향으로 505.6% 급등해 양호했음.
- 한편, 기계설치와 발전 및 송전 수주는 각각 95.3%, 93.3%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임.

<표 2>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항만 및 공항	토지 조성	기계 설치	발전 및 송전
2016. 9월	7,178.9	895.9	695.9	732.1	146.5	511.7	688.4	223.1	240.3	184.0	62.0
증감률	-15.6	-77.3	113.1	35.1	142.0	510.5	211.7	505.6	3.8	-95.3	-93.3
2016. 1~9월	51,024.9	14,410.9	6,884.6	4,830.5	1,104.4	6,053.7	2,842.7	1,489.1	3,031.8	4,023.3	1,494.1
증감률	3.5	1.0	84.5	-5.7	-22.7	156.7	-35.2	116.2	54.3	-46.7	-62.3

자료 : 통계청

박철한(책임연구원.igata99@cerik.re.kr)

트럼프의 “New 인프라 투자 계획” 분석2)

- 민간 자본을 활용한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공약 발표 -

■ 트럼프, 향후 약 10년 간 인프라 부문에 1조 달러(약 1,100조원) 투자할 계획

- 2016년 11월 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수락 연설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기 위한 방안으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재차 강조함.
 - 인프라의 재건은 그 무엇에도 뒤지지 않는,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정의함.
 - 낙후된 도심 지역(inner city)을 재정비하고, 고속도로, 다리, 터널, 공항, 학교, 병원을 재건(rebuild)할 것임을 재확인함.
 - 이를 통해 수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을 기대함.
- 지난 10월 27일 트럼프 진영의 선임정책자문위원(senior policy advisor)인 Wilbur Ross와 Peter Navarr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는 향후 약 10년 간 1조 달러의 재원을 인프라 부문에 투자할 계획임.
 - 선거운동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향후 5년 간 인프라에 2,750억 달러의 연방정부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에 대해, 트럼프는 “적어도 힐러리 투자 규모의 두 배” 이상의 재원을 인프라에 투입하겠다고 주장해 왔음.
 - 최근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향후 약 10년 간 1조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New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함.

■ 세금 증액 없이 민간 자본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 자원 마련 방안 제시

-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힐러리의 계획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새로운 증세 없이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킨다는 것임.
 - 미국의 법인세율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인세 인상을 통한 투자 자원 마련은 기업의 투자 감소와 미국 내 일자리 감소,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함.
- 민간 자본을 활용할 경우, 정부의 행정적인 절차나 관료 체제에 얽매일 필요 없이 필요한

2) 본고는 Wilbur Ross and Peter Navarro, “Trump Versus Clinton On Infrastructure”, 2016.10.27.와 트럼프 홈페이지(<https://www.donaldjtrump.com/policies/an-americas-infrastructure-first-plan>)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시기에 재원을 조달하여 곧바로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움.

-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2012년 이후로 지금까지 12개 이상의, 약 33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가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취소되거나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트럼프는 관료주의의 개선 없이는 미국 인프라의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인프라 프로젝트의 수행에 있어 승인 및 허가 과정을 비롯한 쓸모없는 절차를 없애겠다고 발표함.

● 지금까지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로서 획기적이고 독창적인 재원조달 방법의 부재를 언급함.

- 저금리 시대에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 활용 방안을 도입하여 인프라 프로젝트에 신속한 재원 투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미국의 성장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 강조

● 트럼프는 미국의 인프라 우선 정책(America's Infrastructure First policy)을 내세우며 인프라 건설은 미국의 성장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함.

- 매 2,0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는 880억 달러의 미국 근로자 임금 상승을 일으키며, 1% 이상의 미국 실질 GDP 성장률로 이어짐.
- GDP의 1% 상승은 120만 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프라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고용인의 교육 수준에 비해 높은 임금을 제공함. 현재 미국의 18~34세의 인구 중 약 1/6이 실업 상태임을 고려했을 때, 인프라 투자로 인한 고임금의 일자리 창출은 미국의 실업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 특히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노후 인프라의 재건이 시급한 상황임.

- 미국 내 6만 개 이상의 다리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교통 정체로 인한 미국 경제의 손실은 연간 5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됨.
- 낙후된 댐은 홍수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음. 수자원 시설의 노후화는 학교 및 어린이 집 식수에서 과도한 납 성분의 검출로 이어지는 등 공중위생을 위협하고 있음.

■ 대대적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한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효과 기대

● 민간 자본 활용을 통한 효율적 투자 재원 조달이라는 숙제가 아직 남아 있지만, 트럼프가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프라 투자 확대가 미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분석됨.

이지혜(연구위원 · jihyelee@cerik.re.kr)

글로벌 인프라 회사의 경쟁력 유지 방안

- 외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영입이 가장 필요해 -

■ 인프라 회사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3S(Service, Stakeholders, Sustainability)' 필요

- 21세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글로벌 인프라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기술 등이 접목된 새로운 첨단 기술(new digital technology), 전략적 변화, 리더십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되고 있음.¹⁾
- 특히, 최근 맥킨지 보고서는 인프라 회사의 경쟁력 있고 지속적인 가치 유지를 위해 3S, 즉, 서비스(Service), 이해당사자(Stakeholders),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서비스(Service)는 회사의 인프라를 사용하는 고객이 무엇에 불편함을 느끼고, 무엇을 개선하면 좋아하는지를 파악하여 이들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것임.
 - 이해당사자(Stakeholders)는 회사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예를 들어, 공항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 지역 주민, 공항 내 사업자들, 정부 기관 등이 해당됨)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들의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임.
 -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은 인프라 사업이 저탄소 친환경 정책, 수질 개선 사업 등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임.
-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건설에서 재무(financing), 설계(design)뿐만 아니라 고객, 지역 사회 등 인적 요소(human element)의 만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회사 운영의 핵심으로 '인재의 영입과 유지'를 1순위로 뽑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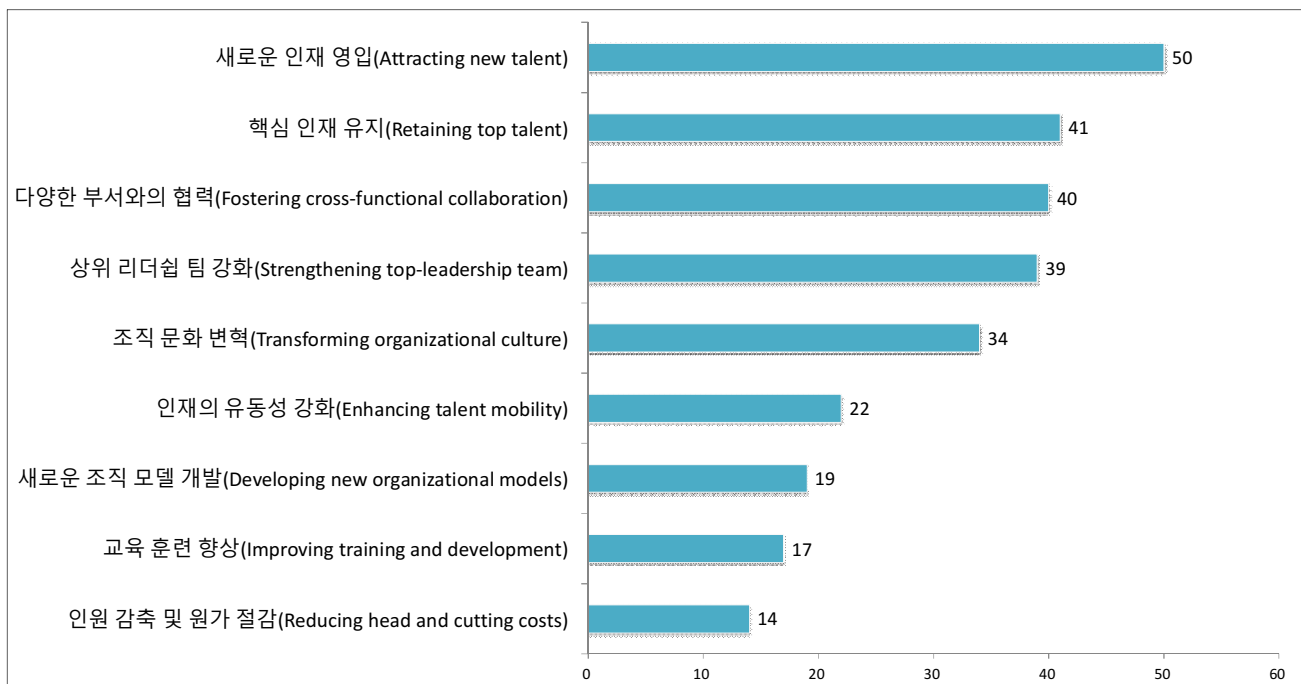
- 이를 위해 최근 맥킨지(McKinsey)에서 전 세계 인프라 회사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회사 운영을 위해 중요한 인적 자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함. 그 결과, 무엇보다도 핵심 인재를 영입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힘.

1) 본고는 최근 맥킨지에서 발표한 'The leadership challenge : Building the future of global infrastructure(2016년 6월)' 과 'Remember the people : The foundation for success in 21st-century infrastructure(2016년 6월)' 기사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것임.

- 설문 조사 결과, <그림 1>에서와 같이 응답자의 50%가 '새로운 인재 영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음. 다음으로 응답자의 41%가 '조직 내 핵심 인재 유지'를 꼽았으며, '다양한 부서와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
- 그 밖에 '상위 리더십 팀 강화', '조직 문화 변혁', '인재 유동성 강화'도 글로벌 인프라 회사가 되기 위한 중요 인적 자본으로 조사됨.

<그림 1> 글로벌 인프라 회사가 되기 위한 중요 인적 자본 순위

(응답자 111명, 단위 : %)



자료 : The leadership challenge : Building the future of global infrastructure(2016년 6월), McKinsey & Company.

■ 국내 건설업체들도 '인재 영입과 육성'에 힘써야

- 최근 세계적 컨설팅 회사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전 세계 인프라 사업은 새로운 기술의 진화와 같은 외부적 압력과 인재 고갈과 같은 내부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함.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숙련된 인력의 영입과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 이상을 종합해보면, 국내 건설업체들도 활발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최은정(책임연구원 · kciel21@cerik.re.kr)

언제 다가올지 모를 ‘깊은 골’에 대한 고민

2017년 국내 건설 수주가 올해 대비 13.6% 감소한 127조원으로 전망되었다. 지난 2년 가까이 호조세를 보인 국내 건설수주가 하락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싶다. 국내 건설 수주는 2015년에 158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존 역대 최고치인 2007년의 127.9조원을 30조원이나 상회하는 호조세였다. 올해에도 국내 건설 수주는 3/4분기까지 작년 수준의 호조세를 지속했다. 옛말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다. 기존 역대 최고치를 30조원이나 상회하는 수주 호조세가 1년도 아니고 2년 가까이 지속된다면 낮은 산은 결코 아니다. 그렇기에 현재 호황기를 마냥 좋아하고 즐길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건설경기가 호황인 이때에 우리는 언제 다가올지 모를 ‘깊은 골’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국내 경제는 건설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 외환위기 직후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처럼 매우 높아져 있다. 건설투자의 국내 경제 성장 기여율은 올 2/4분기 51.5%에 달하였고, 3/4분기에도 66.7%를 기록했다. 향후 건설경기의 급격한 경착륙은 국내 경제의 저성장 구조 고착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9~2020년 사이 건설경기는 동행지표인 건설투자 기준으로 불황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 2년 동안 우리 경제는 과연 건설 외에 다른 구원투수를 찾을 수 있을까? 갑자기 어디선가 혜성 같이 경제의 구원투수가 나타나길 소망해 보지만,

녹록지 않아 보인다. 현재 건설경기 호황은 대부분 민간 주택부문에 기인하는데, 이는 가계부채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이다. 현재의 건설경기 호황이 경착륙으로 내려간다면 국민경제 전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향후 건설경기가 경착륙에 이르지 않도록 서서히 관리가 필요하다. 향후 민간 주택부문이 건설경기 하락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정부는 SOC 예산 축소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2017~2018년 사이 민자사업을 포함해 공공부문의 신규 사업을 늘리는 것이 2019년 이후 예상되는 건설경기 불황 국면을 완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SOC 예산 중 신규 사업 예산이 2015년 이후 부진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2017년 이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자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정책적 관리와 지원도 필요하다.

한편, 건설기업들은 현재 건설경기 호황 국면이 조만간 끝난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건설경기가 불황 국면에 접어들게 될 2020년을 전후해 국내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현재 호황 국면 중에 향후 건설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사업 및 경영 체질의 개선이 필요하다.